



3면

남북미 대화 원칙 확인·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과... 신기술 등 협력강화

전주매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음 4월 13일) 제27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되었다.

재정분권 확대 '한목소리'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앞장
지방정부로서 위상 강화돼
재정 자립 등 필요성 커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부수 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 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에 비해 확대, 지방교부세를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 부담률을 인상할 것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의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유호상 기자

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전북도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도는 지난 21일 정부 방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집단발병이 우려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5월에 이어 6월의 축제·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이동량 증가 최소화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6월 30일까지 지속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의무적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해 감염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 6월 개최를 계획한 4개 축제·행사는 취소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시·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6월 13일까지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동의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65~74세는 오는 27일부터, 80~84세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차 접종을, 5월 20일 시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월 23일까지 2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권, 광역시에 준하게 특례 지정해야”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광역시가 없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게 특례를 지정하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16면> 서울행정학회(회장 한인섭)가 주최하고 서울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한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적극행정과 공공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항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박해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등 국가연구기관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시대 대도시 제도의 방향 및 입법과정과 규제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현 대도시 특례 제도의 틀이 지방자치 부활 전에 성립돼 30여 년 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 요건으로만 대도시의 유형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획일적 일괄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만이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정 자격에 따라 일괄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탈피해 자율·다양·합의 책임에 기반한 상황적 방식의 특례제도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특성화, 광역화, 효율화, 주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도시 정책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 할지라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및 도시 특성, 경제·행정적 특



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이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 시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2+3 권역별 전략
강소형 메가시티 분류된
전북은 광역적 기반 없어
더 심한 불균형 초래”

성, 국토의 균형발전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두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광역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과는 달리 강소형 메가시티로 분류된 전북, 제주, 강원은 광역적 기반이 없어 더욱더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주 또는 전주권을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만들고,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묶어서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등 국가의 실질적인 포용적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 중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및 도시 특성, 경제·행정적 특

적인 분배의 격차가 자생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비로 잡아야 한다”고 재언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도시의 특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주시 특례 지정을 요청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국회를 찾아 광역시 없는 권역의 실질적인 메가시티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주를 ‘제정수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전주가 처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지역 낙후의 굴레를 벗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후위기 대응...전북도, 오늘 탄소중립 특별세션 참여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을 선언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도는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전북도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한편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 행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시퀀스행사의 하나로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유호상 기자

장수물
www.장수물.com

신선이 마시는 천상의 다섯가지맛!
오미자! 명품 오미자 와인과 함께 품격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www.장수물.com **장수물 MALL**
www.장수물.com **NAVER** 장수군청 검색
Tel. 063)350-5448